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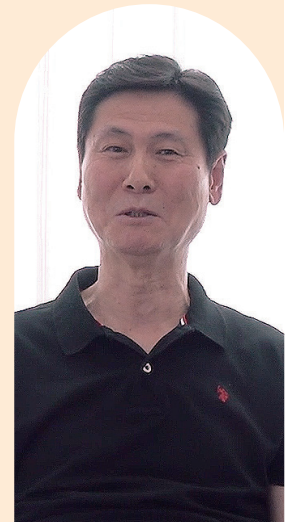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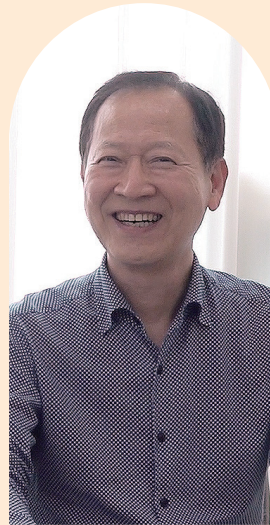
Vol.20

2025 AUTUMN

고령 사회의 생활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특집호 노인일자리 20년 정책 성과와 과제



Contents

권두언

02 노인일자리 20년의 성과와 과제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명사칼럼

04 초고령사회, 존엄과 생산성을 위한 노년 일자리 혁신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특집] 정책효과

06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특집] 소득보장

12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역할과 기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집] 사회참여

18 노년기 사회참여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미와 가치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집] 지역사회 기여

22 농촌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

현장이슈

28 성장하는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바람

이선미 시흥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32 타인도 돌보고, 나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케어, ‘노노케어 사업’!

원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차장

권두언

노인일자리 20년의 성과와 과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성인이 되었다. 올해는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성년식을 올리는 해이다. 2004년 2.5만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시작한 노인일자리가 2025년 약 11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엄청난 양적 성장이다. 국고 기준 예산은 무려 약 10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단순히 예산이라는 비용의 증가만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예산은 노인의 삶의 질 제고라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산과 삶의 질 제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균형적 시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냉철하게 뒤돌아 보고 이를 내일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경제적 측면을 보자. 노인일자리사업은 투입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약 1.6배를 보이는 사업으로 밝혀지고 있다(강은나 외, 2017; 김문정 외, 2021).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참여 어르신들은 연간 약 2,0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건강 증진이 가져온 의료비 절감액(1인당 월 7만원)은 2024년 기준 약 8,329억 원에 이른다. 이는 동 액수만큼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살펴보자.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경우 참여 전 대비 상대 빈곤율을 약 10%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박경하 외, 2021). 또

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등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증진시켜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사회갈등 인식에서 참여자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조사 결과(천재영 외, 2023)는 노인일자리가 사회통합을 제고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측면을 살펴보자. 노인일자리사업은 현대사회의 노인 4고(빈곤, 질병, 외로움, 역할상실)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 가치이다. 노인일 자리를 통한 소득(2022년 월 평균 37.5만원)은 가구소득(103.2만원)의 36.3%를 차지하며 노인일자리 참여에 따른 생활비 지출은 전년 대비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빈고(貧苦)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병고(病苦) 완화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노인일 자리는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사회적 고립 위험도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29.7%, 비참여자 46.4%로, 노인일 자리는 사회관계망을 확장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활동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미만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활동이라는 노동 기여에도 불구하고, 노동 비기여인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가 행복하여야 양질의 서비스가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 직군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성과는 더욱 높이고, 아쉬운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과제를 ‘사업 방향성’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국가의 임무 중의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도 ‘어린이 등하고 지원’, ‘각종 시설 안전 점검’ 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곳에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가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플라스틱 재사용 사업’, ‘통합돌봄 지원’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공공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창녕 ‘안리마을 재생 사업’, 군산 ‘전통시장 내 보리밥집’ 운영 등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인일자리+이야기가 있는 마을+1사촌’을 연계한 모델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노인일자리가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필요하지만 신노년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은나, 백혜연, 김영선, 오인근, 배혜원. (2017).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문정, 김진, 백혜연, 김가원, 박병현, 성경하. (2021).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경하, 한창근, 김은하, 이성학, 박병현, 강시은. (2021).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천재영, 배재윤, 남기철, 손창균, 윤강재, 원시연, 김난주, 이주원, 최지영, 강형민, 천화진, 윤열. (202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KARP) 회장

초고령사회, 존엄과 생산성을 위한 노년 일자리 혁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었고, 매일 2,000명 이상이 퇴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재정투입 일자리로 노년층을 위한 일과 복지개념의 고용 창출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더 이상 정부가 기업의 참여 없이 언제까지 최대 고용주로 노년 일자리를 복지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중구청과 협업해 국내 주요 기업에 시니어 인력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기업이 노년 인력을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 전략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재정투입 일자리에서 노년 인력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연령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역행한다. 노동부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70세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은 단순히 연령으로 재단될 수 없는 사회적 자원이다. 또한 이 좁은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 간의 “우리 구민이어야만 한다”는 뿌리 깊은 님비현상(NIMBY)을 버려야 한다. 적어도 시나 도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일자리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배우며, 벌며, 오래 사는 사회”(이하 ‘배벌사’)를 주창해 왔다. 시니어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존엄을 유지하며,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모델이 Y.O.U(Young-Old-United)다. 청년은 배우고, 노년은 경험을 전수하며, 서로가 멘토이자 파트너로 인구 축소 사회의



생산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시니어세대가 더 이상 부담 층이 아닌 경험 자본, 지속 성장의 원천으로 치부되며 납세자로, 소비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50·60·70세대는 국가 경제를 떠받칠 절대적 인적 자원이다. 이들은 은퇴가 아닌 재도약의 단계에 서 있고 정부와 기업은 이 인적 자원을 거둬들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리부머세대에겐 공공형 일자리가 안전망으로 필요하지만, 베이비붐세대는 다르다. 이들은 더 높은 교육과 경력 경험을 갖춘 세대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과 기업연계형 일자리로 적정 수준의 수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제 시니어세대를 하나로 묶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재정 일자리 정책도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기업형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설계가 필요하다. 공공형은 사회안전망에 집중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교육·돌봄·환경·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형은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시니어가 경험을 살려 참여하고 보상받는 성과 기반 일자리로 발전해야 한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프로젝트 단위 소득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다층적 소득 체계는 노년층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립과 존엄의 주체로 세울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어야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이 가능하다.

초고령사회는 위기이자 기회다. 시니어를 부담으로만 본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을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자원(un-tapped resource), 존엄한 일꾼, 경험 자본,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 “배벌사”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이 길을 선도하며, 시니어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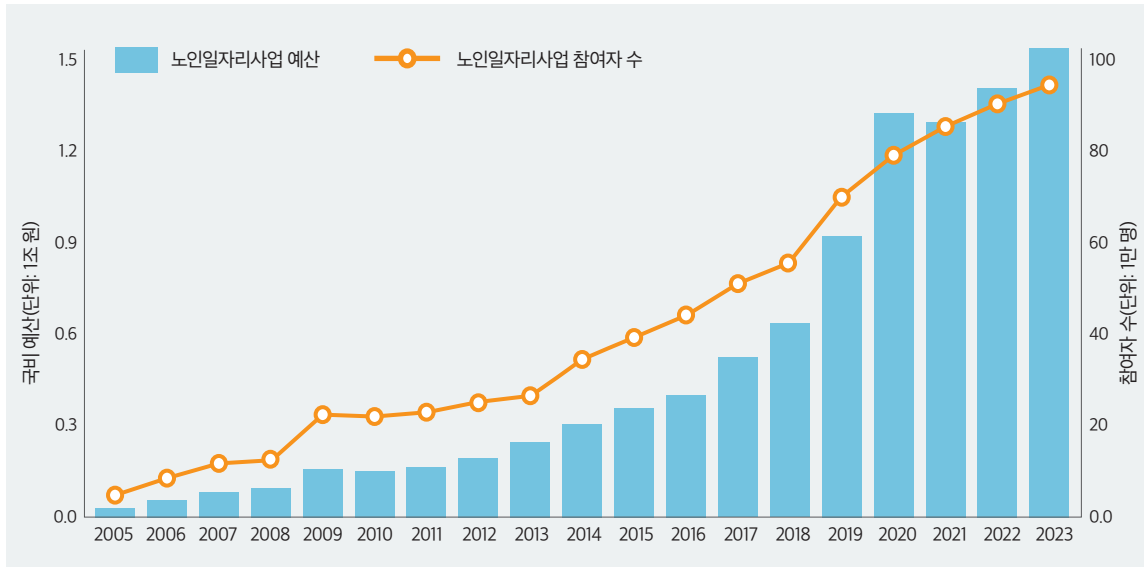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정책문제 중 인구 고령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이나 복지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타개하고자 우리나라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2005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약 272억 원이었으나 2023년 시점에는 1조 5,400억 원 규모로 55배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예산이 6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판단해 보면 얼마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은퇴한 고령층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증가하며, 동시에 복지 수급과 같은 정부 의존도 또한 낮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정책은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적 자립은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에서 다양한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실제 창출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석원, 2008; 이지혜·황남희, 2019; 강소량, 2016;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 2016; 박영미, 제갈돈, 김병규, 2016; 김문정, 김진, 백혜연, 김가원, 박병현, 성경하, 2021).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사회적·건강적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그림 1>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참여자 수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일자리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효과성)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평가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규범적 당위성이나 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편익이 큰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집행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양적으로 비교하여 예산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방법론이다. 정책의 효과성이 커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반면,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책의 편익이 비용을 충분히 상회한다는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당국이나 사회적 동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효과성 분석만으로는 어떤 정책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이나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편익분

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정책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최근 재정학 연구에서 기존 비용편익분석 관련 여러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한 Marginal Value of Public Funds(MVPF)라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다(Finkelstein & Hendren, 2020; Hendren & Sprung-Keyser, 2020). MVPF 이론은 기존 비용편익분석보다 현실적이고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 배분, 사회적 동의 확보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실무적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MVPF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MVPF = \frac{\text{관익}}{\text{순 정부 비용}} = \frac{B}{E -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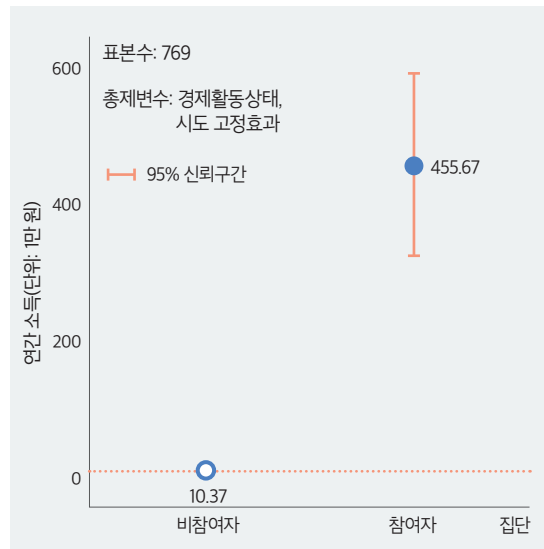
위 식에서 분자의 B 가 가리키는 것은 정책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편익이다. 분모에 있는 E 는 정책에 투입된 정부 지출액이고 S 는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정책이 고령층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위 식에서 B 가 200이 된다. 만약 노인일자리 정책에 고령자 1인당 예산이 1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위 식에서 E 는 100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을 통해 고령자 1인당 월 2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세금을 통해 약 10% 정도를 정부가 거둬들인다고 한다면 위 식에서는 20이 된다. 이런 수치하에서 도출되는 MVPF는 다음과 같다.

$$MVPF = \frac{B}{E - S} = \frac{200}{100 - 20} = 2.5$$

2.5라는 수치는 노인일자리 정책에 정부가 1원을 지출하여 2.5원이라는 수입을 창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어떤 정책의 MVPF가 1보다 크면 클수록 그 정책에 1단위의 재정을 지출할 때 사회적 편익이 1단위 이상 발생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러한 정책에 투자할수록 사회 전체가 이득을 보게 된다. 반면, MVPF가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정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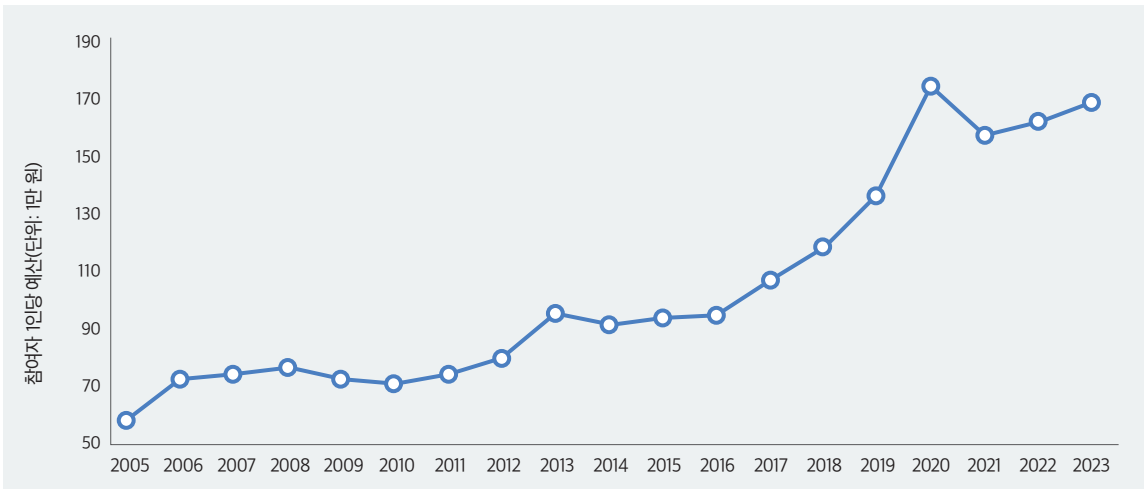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일자리 정책이 소득에 미친 효과 추정값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당국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물론 어떤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의 분배적 효과, 형평성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아무리 형평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MVPF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위 식의 분자와 분모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추정값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분자는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의사에 있는 최대 금액(willingness to pay)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과효과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어 있다면 이 인과효과 값을 사용해서 분자의 추정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는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노인일자리 정책이 소득에 미친 효과이다. 그림에서 흰색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그림 3>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인당 예산 규모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연간 소득 평균이고 진한 동그라미는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연간 소득 평균이다. 결과를 보면, 두 집단의 소득 차이는 약 44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1인당 연평균 4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진한 동그라미 위 아

래로 그려져 있는 세로 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하는데 이 신뢰구간이 가로 점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은 두 집단 간 소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수치가 노인일자리 정책이 소득에 미친 인과효과라고 한다면 분자는 440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분자에는 소득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등 다른 효과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실제 편익은 440보다 더 클 확률이 높고 440은 어떻게 보면 과소추정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모를 추정하는 작업 또한 간단하지 않다. 분모에서 E 는 정책에 투입된 정부 지출액이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1인당 지출된 예산의 연도별 추세인데, 2023년 기준 참여자 1인당 예산은 약 166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E 는 166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분모의 S 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우선 직관적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통해 440만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한다면 이 증대분에 대한 세수입이 S 가 된다. S 를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세수입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건강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정부 의존율 감소 등을 통해 부수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도출한 추정값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MVPF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MVPF = \frac{B}{E-S} = \frac{440+\delta}{100-\lambda} = 2.65+\alpha$$

위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MVPF는 최소 2.65 수준 이상인데 이는 노인일자리 정책에 투입된 예산 대비 최소 2.6배 이상의 편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 더 타당한 MVPF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다양한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절감하게 되는 여러 비용을 분석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 정책의 MVPF를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도출하기 위해 정책의 다양한 인과효과를 식별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편익 추정이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도출되지 않으면 분자 추정값에 편익(bias)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값을 토대로는 정책의 MVPF와 관련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인과효과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무작위통제실험이나 준실험연구설계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순효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일자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수행해서 MVPF의 분모값을 올바르게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 사용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 편익이 확실히 큰 곳에 정부 지출이 집중되므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소량. (2016).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6(1): 109-138.
- 이지혜, 황남희. (2019).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1): 11-38.
-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 (20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특성에 따른 보건의료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95-122.
- 박영미, 제갈돈, 김병규. (2016).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참여유형과 참여기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61-286.
- 김문정, 김진, 백혜연, 김가원, 박병현, 성경하. (2021). 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연구-기본-21-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Finkelstein, A., & Hendren, N. (2020). Welfare Analysis Meets Causal Infer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4): 146-167.
- Hendren, N., & Sprung-Keyser, B. (2020). A Unified Welfare Analysis of Government Polic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3): 1209-1318.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의 역할과 기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3월 국회는 18년 만에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과 주요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과제를 입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보건복지부, 2025a). 소득대체율 조정(40%→43%)과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조정안(9%→13%)도 함께 통과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대립의 주요한 한 난제였던 연금개혁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점 또한 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개혁은 미루어지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등만 포함된 모수개혁에 그친 점이다. 18년 만의 사회적 타협이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이번 연금개혁의 성과는 현세대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자살 역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빈곤대책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연금개혁을 토대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통해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래세대는 물론이고 올해 개혁에서 담지 못했던 현세대 노인의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다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은 현세대 노인빈곤세대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 및 재정학자 등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류재린 외, 2022; 성혜외 외, 2023). 물론 이들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축인 것은 인정하지만, 현세대 노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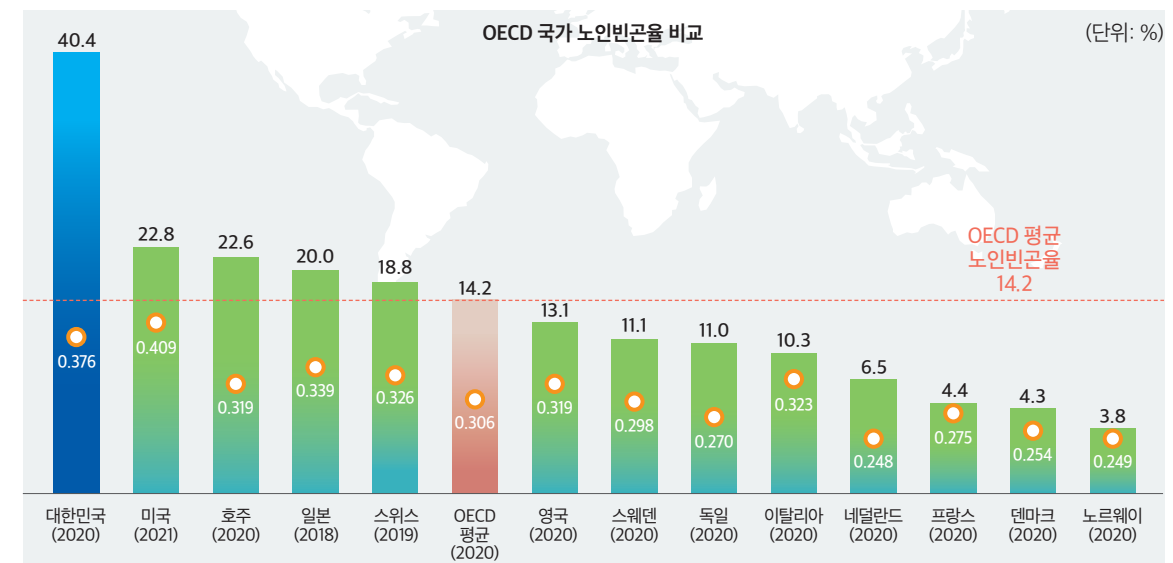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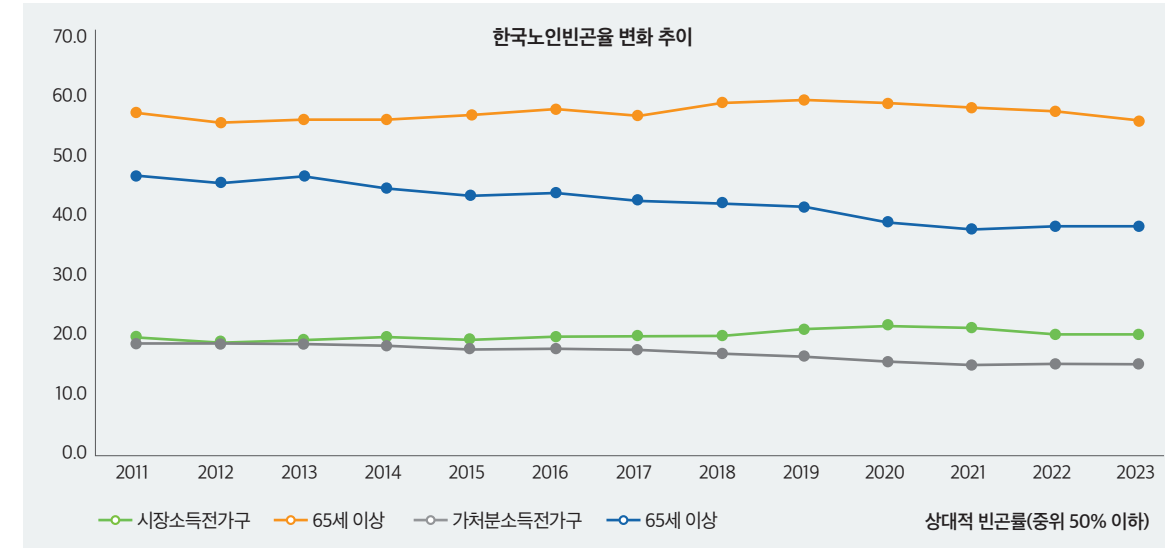
사업과 이들 사업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 등에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은 한계임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7.6%(755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노인일자리 사

업량은 90만 건 이상에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사업량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들 두 사업에서만 현세대 노인의 18~20%에 이르는 노인이 지원과 참여 중에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에서 두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1> 한국노인빈곤율 변화

(단위: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소득분배통계, 재인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동향.

노후소득보장 개혁이 노인빈곤 개선과 자살률 축소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현세대 노인의 계층분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또한 빈곤층 지원제도인 생계급여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제도 간 정합성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세대 노인의 소득과 자산분포를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빈곤율은 38.2%(2023년)이며, 동 기준은 보건복지부 적용 기준중위소득 75% 미만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기준 75~100% 사이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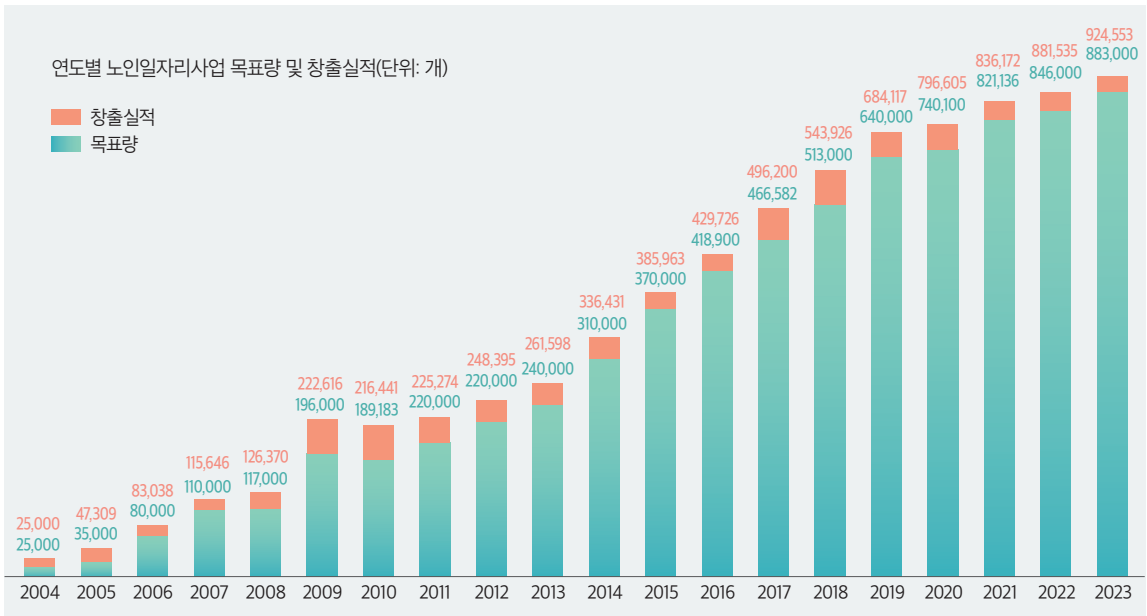
<표 1> 연령별 인구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명)

연도	계	0~4	5~9	10~19	20~39	40~64	65세 이상
2016년	2.2	0.8	1.3	2.6	0.8	2.2	5.6
2017년	2.2	0.8	1.2	2.5	0.8	2.2	5.5
2018년	2.2	0.8	1.2	2.3	0.8	2.2	5.4
2019년	2.2	0.8	1.1	2.1	0.8	2.2	5.3
2020년	2.4	0.8	1.1	2.1	0.9	2.4	5.4
2021년	2.7	0.9	1.2	2.2	0.9	2.5	6.8
2022년	2.9	0.9	1.3	2.2	0.9	2.6	7.2
2023년	3.0	0.9	1.3	2.2	1.0	2.7	7.4
2024년	3.1	1.0	1.5	2.3	1.0	2.8	7.6

출처: 보건복지부, (2025b).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저자수정.

<그림 2> 노인일자리 사업량 추이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기초연금 수급층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 참조). 현세대 노인의 분포를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약 20.1%는 중위기준 월소득이 79.3%에 불과하다. 노인빈곤 개선을 위해 이들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최빈층 7.6%(생계급여 수급비율)), 이를 벗어난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2>의 그룹 ①과 ②에 해당되는 노인계층은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역시 다른 노인계층에 비해 많지 않아서 자산을 활용한 소득보

장방안(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활용될 수 없는 계층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표 2>에서 ③과 ④에 해당되는 노인계층은 빈곤선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¹⁾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전체 노인의 약 10%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공되고 있지만, 빈곤에 처한 노인의 규모를

1) <표2>에서 ④, ⑤, ⑥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층은 빈곤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빈곤한 청년 및 중장년 등과의 비교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청년, 중장년 등의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는 근로장려세제로 연 1회 현금급여(근로자 반기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점이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빈곤선을 넘어서 소득을 가진 노인층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보다는 현물서비스 확대(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방안 마련)를 통해 지출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2> 중위 및 기준중위소득 수준별 노인의 소득 및 자산 수준 (단위: 만원)

구분		노인분포	(균등화)가처분소득('23년)		자산('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평균	중위	총자산	부동(자)산
50% 미만	50% 미만①	20.1	76.7	79.3	7,940	5,163
	50~75% 미만②	17.9	128.5	127.9	17,755	13,900
	75~100% 미만③	0.2	156.3	156.3	27,259	20,213
50~75% 미만	75~100% 미만④	13.3	181.6	181.5	24,860	19,823
	100~150% 미만⑤	7.0	221.6	221.7	31,850	24,100
75~100% 미만	100~150% 미만⑥	15.0	270.8	269.5	34,103	26,850
	150% 이상⑦	0.2	312.3	312.3	38,103	28,800
100~150% 미만	150% 이상⑧	16.8	377.3	372.3	53,990	43,700
150% 이상	150% 이상⑨	9.6	757.5	607.7	117,310	88,700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분석.

고려해 보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약 7~8%의 노인을 지원하고 있는 속에서 노인빈곤율과의 차이인 약 30%에 이르는 노인을 지원하고, 또는 건강하고 일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빈곤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공되

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규모가 크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 노인일자리사업은 여러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했거나 진입하게 될 제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세대



는 여러 이력과 경험을 지닌 것을 평가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역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기 이전 현재와 같이 노인공익활동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시 월 29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표 2>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노인그룹 ①, ②그룹의 평균 및 중위소득은 빈곤선과 차이도 있으며, 소득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선과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여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현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화를

시도해 보았다. 단순히 살펴 본 노인소득 계층 분석과정에서 보면 노인빈곤 수준 완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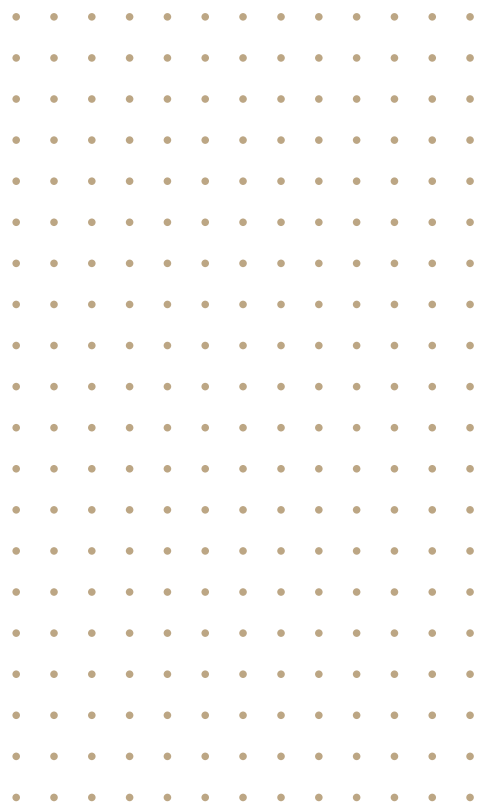
참고문헌

- 류재린, 정해식, 이용하 외. (2022).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5a).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03.20).
- 보건복지부. (2025b).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성혜영, 정인영, 문현경 외. (202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 국민연금연구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동향.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소득분배통계.

노년기 사회참여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의 의미와 가치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무료하고 외로운 노인

전통적으로 노인이 되면 4가지 고통(四苦)을 겪는다. 점차 할 일이 없어지면서 일상이 무료해지는 무위고(無爲苦),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외롭고 고립되는 고독고(孤獨苦),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건강고(健康苦), 경제활동의 축소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경제고(經濟苦)를 겪게 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4고(四苦)'를 겪고 있다.

특히 은퇴로 인한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의 감소로 인해 쉽게 무위고와 고독고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다. 노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고,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된다”며 무료함을 호소한다. 무위고는 퇴직 및 역할 상실, 사회적 책임감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무위고는 단순히 한가함이나 여유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료한 일상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사회와 가족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노인들은 “평상시에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 외롭다”라며 고독고도 자주 말한다. 고독고는 가족과 이웃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약화, 지역사회 참여 기회 상실, 상호 돌봄 관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노인이 겪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사람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상실감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노인들이 무료하고 외로운 일상에 직면해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신체와 정신 건강의 악화, 나아가서 고독사와 자살의 위험까지 내모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사회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이처럼 무료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경험을 할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최근에 실시한 연구 결과(배재윤 외, 2023, 2024)를 살펴보면,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사업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생겼고



정기적인 일자리 사업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이 생긴다. 규칙적인 일정이 생기면서 생활의 리듬이 잡히고 중심이 잡혀진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 시간에 맞춰서 자신을 꾸미고, 활동을 위해서 집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회참여가 늘어난다. 기존의 무료한 일상에서 탈피해서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활동을 하면서 삶에 리듬이 생기고 활력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일자리 사업의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이 노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 “할 일이 없을 때는 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는데, 이제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하루가 기대된다”고 말한다.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생동감이 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역할 감소로 인해 할 일이 없어지는 노인에게 할 일을 제공하고,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인의 무위고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이 되면 각종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경험하는 답답하거나 힘든 감정을 나눌 사람도 별로 없다. 이는 노인을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류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눌 기회를 갖게 된다. 일자리 사업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식이나 친구와의 갈등과 외롭고 힘든 일상 등을 나눌 수 있다. 서로가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고 인정(認定)하고 지지해준다. 이와 함께,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얻고 제공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삶의 지혜나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나 이런 걸 다 알려주신다”고 노인들은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신뢰가 구축되면서 소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

성된다. 노인의 일상과 삶의 소중한 지지체계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의 고독고가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와 연결되면서 소속감을 회복하게 만든다. 노인들은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인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소속감을 느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노인들은 과거에는 사회에서 ‘분리’된 ‘소외’된 존재로 느껴졌는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일자리 덕분에 집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분절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통합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아지게 만든다. 일자리 사업은 공익성에 기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이나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된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노인은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노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거둬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노인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노인들은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인은 어려운 이웃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나도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필요한 존재라며 당당한 인식을 갖게 된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며 동료와 안부를 나누고, 사회에서

내가 쓸모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이처럼 노인들은 작은 일이지만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에 만연한 연령차별주의(ageism)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에는 고령화 위기 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노인이 사회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되고 경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 젊은 세대들도 감사해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노인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주민들을 마음으로 돕고 지원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가 연령에 의해서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더 나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향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무위고와 고독고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와 같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개별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세상에

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시켜 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더욱 개별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동시에 시로 인한 디지털 중심 사회로 변모하면서 노인들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 노인의 삶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면서 이들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 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인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배재윤, 김윤영, 박상현, 전용호. (2023).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험 연구. Korea Labor Force Institute for the Aged.
- 배재윤, 박상현, 전용호. (2024). 노인일자리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농촌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들어가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 20년째를 맞은 올해, 우리 사회는 어느덧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에 들어섰다. 그동안 일자리는 2만 5천 개에서 109만 8천 개로, 예산은 213억 원에서 2조 1,84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필요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노년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소득보전 정책에 그치지 않았다.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존감과 효능감을 유지하도록 돕고, 지속적인 활동과 교류를 통해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곳곳의 돌봄 인프라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했다.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키는 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하는 일,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누군가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적소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노인복지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축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농촌에 필요한 돌봄

농촌은 매우 가파르게 고령인구가 늘고 있다. 청년층의 유출과 맞물린 인구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소멸에 대한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귀농·귀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사이 농촌의 삶의 여건은 악화되었다. 아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동네 슈퍼, 식당, 약국 같은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이 줄었고, 경영난에 부딪힌 운수업체는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했다. 마을에는 빈집이 늘고, 마을 안에서 서로를 돌보던 구조도 과거에 비해 희미해졌다. 그나마 농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동체 전통은 농사일, 집안일, 마을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부녀회 덕분에 명맥을 이어간다.

이러한 변화는 곧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길은 멀어졌고, 장을 보러 가는 일도 쉽지 않다. 도움을 줄 이웃은 줄어들어 전구를 갈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일조차 해결이 어렵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도움부터 긴급한 돌봄까지, 농촌에는 채워야 할 공백이 많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이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수요가 높은 농촌에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농촌에 필요한 돌봄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건강과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을 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 외에도 일상생활과 맞닿은 돌봄 수요가 크다. 전구 교체나 수도 누수 같은 집수리, 벌초와 풀베기 같은 주변 정리, 대형 빨래 세탁, 쓰레기 처리, 원격지 택배

수령까지 생활 곳곳에서 작은 손길이 필요하다. 또한, 생필품 구입, 외출 동행, 공동식사 마련과 같은 일상 지원, 마을 갈배수로·공동 시설 관리까지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돌봄 사업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영역이다. 전문성이 높거나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호연대 속에서 꾸준히 힘을 보태야 하는 일들이다. 결국 농촌에서 필요한 돌봄은 도시와는 다른 환경과 공동체 구조를 반영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가능성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처럼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농촌 돌봄을 위한 실행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도권 돌봄사업처럼 엄밀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참여 노인에게는 사회적 유용성과 유능감에 더해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 오롯이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일정한 소득까지 제공하는 엄연한 일자리이므로 돌봄 제공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 노인일자

리사업을 통해 개인의 복지 증진을 넘어, 공동체의 유지와 활력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노인이 일한다 = 마을이 유지된다.”는 공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일부 비판도 있다. 가뜰이나 농업 인력이 부족한 판국에 노인들을 일자리사업에 붙들어 두는 게 맞느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본래의 취지가 흐려졌을 때 생겨나는 불만이다.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공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메우는 것,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진짜 강점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힘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 빨래방을 만

<그림 1> 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



출처: 중부매일 기사(2023.04.05). “새로운 복지모델 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care farm)’”.

<그림 2> 춘천시 신북읍 이웃복지사



출처: 춘천사람들 기사(2023.04.03).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복지사’들”.

들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수거·배달 서비스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돌봄농장(생거진천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는 ‘나이들기 좋은 마을’을 내걸고 반찬 나눔, 아·미용 서비스, 병원 이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이웃복지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활약 중이다.

앞으로의 과제

농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돌봄의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지역의 우선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농촌은 마을 규모, 인구 구조, 생활기반시설 등에서 차이가 크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마을 단위에서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한 ‘농촌 맞춤형 기

획’이 중요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교통 불편, 인구 분산, 서비스 공백을 고려한 유연한 구조를 마련하고,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 활동 범위와 업무 강도를 조정하며, 계절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맞춤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은 사업 기획 시 지역 여건과 돌봄 공백을 사전에 파악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각 농촌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 운영 사례를 메뉴판처럼 제공하여,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둘째, 돌봄 인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농촌 돌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응급상황 대응 등 기본적인 실무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단기간이라도 안전교육과 매뉴얼 교육을 필수화하고, 경험 많은 참여자를 ‘돌봄리더’로 육성해 현장에서 역할을 조율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월 1회 사례회의와 피



드백 시간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면, ‘농촌형 돌봄 인력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제도권 돌봄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촘촘한 마을돌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기존 제도와 중복·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단순 보조인력이 아닌 ‘마을돌봄의 거점 인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돌봄망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활동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지역 보건소나 읍면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 등과 즉시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일 이 될 수 있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이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농촌에서의 돌봄 활동은 단순히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세대 간 연결과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며,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한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가 마을을 지탱하는 ‘공동체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라는 부처의 틀을 넘어 농업·농촌 정책, 지역활성화 정책과 연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마치며: 농촌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20년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전국 각지에서 노인이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 농촌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건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마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자원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농촌에서 부족하기 쉬운 돌봄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까지 보여준 가능성을 넘어, 농촌 맞춤형 돌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참여하는 노인들이 마을의 돌봄과 사



회적 연결망을 지탱하고, 주민 간 유대와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야말로 ‘농촌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의 모습이다.

20주년을 맞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농촌 공동체를 지지하는 튼튼한 기반으로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내일을 열어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성장하는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바람



이선미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단순히 일정한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감을 회복하고 하루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는 자존감을 확인하게 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사회활동은 노인의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증 발생률을 낮추며, 장기적으로 의료·돌봄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배경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 중심에는 고령자의 저소득 문제가 자리한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¹⁾,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13.1%)²⁾의 3배에 달한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수준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산 소득이 없는 다수의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에, 건강이 불안정하더라도 무리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아프지만 하루라도 더 나와야 한다”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더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 초기에는 공익형 중심으로 출발하여 환경정비나 질서 유지 등 단순 반복형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으로 사업유형이 다변화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 노무 제공을 넘어 돌봄 서비스, 지역경제 기여, 전문 경력 활용 등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사업 규모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시장형 사업을 통해 소규모 창업과 지역 경제활동이 가능해졌고, 사회서비스형을 통해 아동 돌봄·노노케어·장애인 보조 등 사회적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력과 전문성

1) 통계청, (2024). 2024 고령자 통계. 통계청. <https://kostat.go.kr>
2) OECD, (2023). Poverty rate (indicator). OECD Data.

을 가진 노인이 자신의 경험을 다시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는 단순 소득지원 정책을 넘어 고령자의 사회참여, 자존감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지역사회 공익 강화 등 다층적 성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유형의 변화와 확대가 곧 노인일자리의 다양성 확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인일자리는 점차 고령자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나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안전한 사회, 고령자 안전 확보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근무 현장뿐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³⁾, 2023년 65세 이상 근로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약 1만 3,000건이며, 이 중 20% 이상이 출퇴근 중 발생했고, 나머지 80%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특히 넘어짐·미끄러짐(37%), 근골격계 부상(22%), 기계·도구 취급 중 부상(15%)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무더위·혹한 등 기상 조건이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자 선발 규정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소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건강 상태, 인지 기능, 학력, 경력, 생활습관, 거주 환경 등 근로 관련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직무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계획·실행·개선·모니터링 단계가 충실히 이루어지며, 실내외 근무환경, 작업도구 노후화, 출퇴근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등 다양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이제 매년 찾아오는 현실이며, 2025년은 특히 숨이 막히는 극한 폭염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3)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4) 기상청, (2025). 2025년 7월 폭염일수 통계. 기상자료개방포털.



커지고 피해도 심각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⁴⁾, 2025년 7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3.3일로, 평년(3.7일)보다 3.6배 많았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혹서기에 노인 야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 안전·직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대체활동 체계를 사전에 갖춘 경우는 여전히 많지 않았다. 국지적인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상청의 공식 경보·주의보 발령 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체활동이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필수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초기사업 신청·계획서에 폭염·한파·미세먼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대체활동, 안전교육 계획(기본 및 추가)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대체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염 경보 발령 시 참여자를 지역 내 무더위쉼터 점검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이는 쉼터의 냉방 상태, 음료 비치 여부, 안

내 표지판 점검, 취약계층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인천의 **교회는 폭염이 한창이던 2025년 여름, 폐지를 줍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을 대체 교육장 겸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다. 이 공간에서는 건강 교육, 스팸·피싱 예방과 같은 실생활 밀착형 교육이 제공되었고, 무료 급식이 함께 이루어지며 어르신들이 더위와 생계 위기를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⁵⁾

변화하는 노년층을 위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우리나라 고령층의 학력 수준은 세대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⁶⁾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2010년 8.6%에서 2024년 20%를 넘어섰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영·기술 경험,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구조는 여전히 단순 반복형 공익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서비스형(역량활용) 일자리가 존재하지만, 전체 일자리 규모에 비해 한정된 규모로 인해 고학력 노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학력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은퇴 전·후의 경력, 자격, 전문분야, 언어능력, 연구·창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역량 프로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교육·멘토링, 정책 자문, 문화·관광 해설, 국제협력·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고학력·경력 보유 노인의 사회참여형 일자

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SES(Senior Experten Service)⁷⁾는 1983년 설립 이후 은퇴 전문가를 국내외 기업, 학교, 기관에 파견하여 기술 이전, 품질 개선,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 시니어 전문가 네트워크다. 평균 연령 70세, 등록 전문가 1만 4천여 명이 실전형 과제를 수행하며 산업과 교육 현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Encore Fellowships⁸⁾는 고숙련 은퇴자를 비영리·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유급 배치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조직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은퇴자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미국과 유럽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창업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창업기금을 마련해 초기 사업화 자금과 브리징 자금을 지원하고,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다.

고학력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형, 지식창업형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소득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은퇴한 전문가의 경험과 기술을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재투입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층과 고령층의 협업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강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다양화를 이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고령사회에서 생산적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과 전략적 역할

법정조직이 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20년간 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화와 확산을 주도하며, 전국적인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사

업 규모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에 기여해 온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고령사회 심화와 기후위기, 안전문제, 노동시장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경과가 아니라,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노인인력개발원은 국가 차원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직무 유형, 참여자 특성, 안전사고 현황, 기후위기 대응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 직무 매칭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매뉴얼, 기후위기 대응 지침, 안전교육 콘텐츠를 표준화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안전과 기후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공익형·창업형·공동체형 등 사업 유형별 특성에 맞춘 소득보전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⁹⁾

맺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자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고령사회 지속가능성의 핵심 정책이다. 저소득 고령자의 현실, 건강·안전 문제, 기후위기, 법·제도 사각지대 등 복합 과제를 해결하려면 안전 중심 직무 설계,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사전 작성 의무화, 공공자원 활용의

법제화, 참여 기준 재검토, 유형별 소득보전 장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참여 어르신이 안전하게 일하며 안정된 소득을 얻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뒷받침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설립 20주년을 맞은 노인인력개발원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고령사회 정책 허브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유럽의 선진사례처럼, 안전·기후 대응·직무 혁신의 표준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역할을 강화하길 바란다.

고령사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단기 소득 지원을 넘어, 노인이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을 지키며, 지역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통계청. (2024). 2024 고령자 통계. 통계청. <https://kostat.go.kr>.
- OECD. (2023). Poverty rate (indicator). OECD Data.
-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기상청. (2025). 2025년 7월 폭염일수 통계. 기상자료개방포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9025호. (2022. 12. 27. 시행).
- CBS 노컷뉴스, “폐지 수집 어르신 위해 예배당 개방…건강·사기에 방 교육과 무료 급식 제공”, 2025.07.22, <https://www.nocutnews.co.kr/news/6373086>.
-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Network for Ageing Policy Report. Brussels: EU Publications.
- Senior Experten Service. (2023). About SES. Senior Experten Service. <https://www.ses-bonn.de>
- Encore.org. (2023). Encore Fellowships Program Overview. Encore.org. <https://encore.org/fellowships>

5) 인천 해인교회가 2025년 7월 폭염 기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을 개방하여 건강 교육, 사기 예방 교육, 무료 급식을 제공한 사례. CBS 노컷뉴스, 2025.07.22, <https://www.nocutnews.co.kr/news/6373086>
6) 통계청, 2024, <https://kostat.go.kr>
7) Senior Experten Service, 2023, <https://www.ses-bonn.de>
8) Encore.org, 2023, <https://encore.org/fellowships>

9) 유럽연합(EU) 산하의 ‘European Network for Ageing’은 각국의 고령자 고용 및 사회참여 정책을 연계·조율하는 기구로, 직무 표준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후위기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고령친화 직장 인증제 운영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 연구와 현장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회원국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재정 지원을 통해 혁신적 노인 고용 모델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Network for Ageing Policy Report, Brussels: EU Publications, 2024).

타인도 돌보고, 나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케어, ‘노노케어 사업’!

인터뷰 고양시니어클럽 최준혁 사회복지사, 이길녀 참여자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원신원 차장
사진 홍보기획부, 고양시니어클럽

노노케어 노인이 독거노인 등 요보호 어르신 대상으로 말벗, 일상생활 지원, 외부활동 지원, 생활상태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단

이번 ‘고령사회의 삶과 일’ 발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2021년 창간호 이후 20번째 발간이 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동안 ‘우리동네 노인일자리’에서는 주로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발간 20호, 설립 20주년의 의미를 살려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아보았다.

여러 노인일자리 분야 중 특히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듬해인 2005년 ‘노인간병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중 하나이다.

‘노노케어’ 사업(노인공익활동)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5만 5천 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 동년배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말벗 등 정서적 지원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에게는 보충적 소득

지원, 사회활동에 따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노인복지 모델로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주된 활동으로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인 안부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 등을 수행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가구 수는 2,272만 8,163가구로 전년보다 약 35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특히 1인 가구는 전체의 약 35%인 78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거노인 가구는 약 214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27.3%에 해당한다. 향후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나는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양식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상황에 고령층의 복지

취약노인*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 가능



왼쪽부터 이길녀 참여자, 최준혁 사회복지사

사각지대에 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부 확인, 말벗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노노케어 사업단의 담당자와 참여자를 경기도 고양시니어클럽에서 만나보았다.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참여자 대상 인터뷰 방식으로 지면에 담아보았다.

Q. 노노케어 사업단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최준혁 사회복지사** 고양시니어클럽은 2007년에 지정 승인을 받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특히 노노케어는 2012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 간

단한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최준혁 사회복지사** 현재 71분이 참여 중이신데요. 남성 참여자들은 네 분만 계시니 여성 참여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주로 생활비나 용돈 보탬을 희망하여 참여 중이시나, 배우자 사별 또는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 홀로 계신 분들이 적절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참여하기도 하십니다. 가정주부로 지내셨던 어르신들이 상당수라 노노케어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고요.

Q. 노노케어 참여자들은 서비스 대상자 가정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최준혁 사회복지사** 참여자들은 서비스 대상 어르



고양시니어클럽 노노케어사업단 활동 모습

신 댁에 방문하여 안부나 말벗과 더불어 간단한 일상 생활 지원(간단한 정리정돈, 청소, 식사 및 약 복용 도움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2인 1조로 서비스 대상자와 연결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1명만 집에 오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1명의 참여자만 매칭하고 있습니다.

• **이길녀 참여자**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 대상자분이 혼자 계시니까 전화로 안부도 자주 묻고 복지관에 같이 다니기도 하면서 외출도 동행하고 있어요. 김치도 만들면 나눠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Q. 노인일자리가 무척 다양한데 어떤 계기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 **이길녀 참여자** 저는 빌딩에서 매장 운영을 오래 했는데요. 남편이 알츠하이머가 와서 간병을 하다 저도 건강이 안 좋아져 심장수술도 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어요. 노인일자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참여자 격이 안돼서 그런지 잘 안돼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노노케어 사업에 뽐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활동도 해볼까 하다가 노노케어가 잘 맞아 쪽 하고 있는 거죠.

Q.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 좋았던 점 등이 궁금합니다.

• **최준혁 사회복지사** 노노케어 사업을 담당하면서 보람을 느낀 순간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자와 서비스 대상자들이 연결된

후 모니터링이나 상담에서 ‘내년에도 꼭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린 않았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노노케어가 어르신들께 있어 사회적 교류망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서로 낯설었던 두 어르신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드렸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정기적으로 소통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을 연결하는 것 이상인 황혼기의 친구들을 만들어 드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길녀 참여자** 제 서비스 대상자는 87세이신데 저희 집이랑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김치도 하면 조금씩 나눠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25,000원 정도 외식도 같이 하고, 마치 언니 같아요. 저도 혼자고, 언니도 혼자니까 노인복지관에도 같이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주중에 노인일자리와 노인복지관 활동이 제 삶을 꽤 차게 만들어주죠.

Q. 노노케어에 참여하거나 사업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

• **이길녀 참여자** 어렵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서비스 대상자분들이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저도 걸린다고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그 며칠 동안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랬어요.

• **최준혁 사회복지사** 노노케어 사업을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참여자분들의 중도 포기와 그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대상자와 참여자 간 연결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단순히 대체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 상황, 거

주지, 성격, 활동 시간과 같은 희망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연결해야 하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와 서비스 대상자 간에 활동 방식이나 기대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지해서 참여자분께 서비스 대상자를 다시 배치해드려야 하는데, 이 참여자의 특정 조건들로 다른 대상자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 활동이다 보니 세심히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거죠.

Q. 향후 사업 추진을 할 기관들에게 운영 노하우를 알려 주신다면요.

• **최준혁 사회복지사** 노노케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혜자 모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직접 사업단을 찾아 신청하시곤 하지만, 정작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거든요.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르신이 취약 어르신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생활 안전을 점검, 보조하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교적 활동 강도가 낮고, 참여자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 노인이라는 점에서 참여에 있어 거부감이 적고 이중적인 복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른 일자리와 구별되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녀 참여자** 제가 생각할 때 봉사정신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기 시간도 있으면서 친구도 많지 않은 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노케어를 통해 자기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도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럴 때 지역 내 문화 활동 모임이나 교회 등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끼리는 서로의 생활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기 어려운 대상자까지도 자연스럽게 파악,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내에서 이렇게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어르신들을 파악한 후 그분들을 통해 노노케어 서비스 필요 어르신을 파악하여 노노케어 참여자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기관에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운영되는데, 노노케어 사업에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최준혁 사회복지사** 일반적인 공익활동들이 지역 사회 환경이나 아동·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면, 노노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직접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어떤 의미인가요?

“나에게 노인일자리는 ‘제2의 인생, 활기찬 청춘’이라 할 수 있어요”

이길녀 참여자는 탁구, 포켓볼, 댄스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고 계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60살 넘어 복지관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라. 젊었을 때보다 노인일자리와 노인복지관을 통해 풍성한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Q. 노인일자리 참여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실까요? 가족 등 주변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길녀 참여자** 노인일자리를 통해 용돈도 벌고, ‘나는 돈도 버는 사람이다’라며 자존감도 높아지고 소속감도 생겨서 정말 좋아요. 딸이 제가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이야?’ 하고 그래요.

Q. 이 사업 외 참여하고 싶으신 다른 노인일자리가 있으신가요?

·**이길녀 참여자** 현재 일자리 외에 다른 노인일자리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제 상황에서 지금 이 일자리가 좋습니다.

Q. 2024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올해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노인일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최준혁 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아드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주저하지 말고 꼭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말 괜찮은 내용의 사업단들이 운영 중이니 참여하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녀 참여자** 우리나라 살기 참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참 많고 다양한데 나라에, 사회에 보탬이 되



고양시니어클럽 노노케어사업단 활동 모습



는 노인일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현재 47개 사업단, 2,0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있다. 매년 고령화율은 높아지면서 하나의 수행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량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참여자도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노노케어 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352명, 서비스 대상 노인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계속해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노노케어’ 참여자, 서비스 대상 노인 모두 90% 이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7.5%로 1970년(3.1%)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2070년이 되면 46.6%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노인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서비스 대상자의 수

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길녀 참여자가 말한 것처럼 노노케어를 통해 참여자 자신도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과 자존감도 올라가며 서비스 이용자와의 인간관계로 인해 상호돌봄의 가치를 갖는 노노케어 사업,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묵묵히 일조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가원 외. (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청. (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보도자료.
- 디멘시아 뉴스(치매 공감 전문 언론 dementianews). 2025.03.25.

고령 사회의 살과 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편집위원장

이인재

편집위원

유태균, 이소정, 손균근, 신우철,
조준행, 박경하, 조홍영, 김문정, 장보현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5년 9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그레이츠 송례)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15

팩스

02-6731-6100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15)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익산의 다이로움을 함께하는 다이로움한끼밥상

전북익산시니어클럽 공동체 사업단 ‘다이로움한끼밥상’은 예로부터 깔끔하고 맛있게 유명한 익산의 食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니어분들의 손맛과 정성을 담아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2024년 첫발을 내디뎠다. 2023년 인프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작된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사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가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다이로움한끼밥상은 익산시청과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조리부터 배달, 안전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북익산시니어클럽 노인역량 활용사업인 ‘더불어함께 서포터즈사업’과 연계해 포장과 배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공동체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결합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벤치마킹이 가능한 선도적 노인일자리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이로움한끼밥상의 활동은 단순한 식사배달을 넘어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의 안녕과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돌보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손맛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 ‘착한소비’를 실천하는 뷔페 및 주문도시락을 운영하고, 건물 내 2층 공간대여 사업을 병행하여 매출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영양사를 포함한 10명의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 그리고 정성 어린 손맛은 한 끼 식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이웃의 삶을 채워주고,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음식을 넘어 마음을 이으며, 어르신들의 손맛과 정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다이로움한끼밥상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

다이로움한끼밥상



-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로 81
- 문의: 063-834-0253



9 772765 277003
ISSN 2765-2777